

#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에 대한 탐구적 연구

김은영 | 가톨릭관동대학교

## I. 목차

### I. 머리말

### II. 사이버 영향력공작 관련 개념 정리

### III. 북한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발달, 목표, 전략 그리고 전술

1.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발달과 목표
2.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추진체계, 전략과 전술

### IV. 북한 영향력공작의 전개방식과 특징

3. 북한 영향력공작 전개과정·방식
  1. 북한의 사이버 공간의 활용: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사회혼란유도, 선거개입 및 간첩교신

### V. 결론과 논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이버전, 사이버심리전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전력이다. 한국은 고도화된 정보화, 민주화의 환경으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환경적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북한의 한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의 우려는 매우 실존적인 위협으로 우려되고 인식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 공작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NATO 회원국들과 미국, 등에서 최근 수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 및 특정 이해당사자 국가들에 대해 벌인 영향력 공작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실제로 북한이 한국의 선거기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북한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정치지형 형성을 위한 여론조성과 사회혼란조장을 위해 허위정보유포와 정보조작활동을 여러 형태로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들에 높은 개연성을 가지는 사례들과 증인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을 한국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합법적 행위를 모방하여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악용하여 대중에게 접근하고 대중들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들로 이해한다면, 북한 역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상 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 목적, 전략, 전술, 그리고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한국 여론 및 선거 개입사례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의 활동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 및 토론 부분에서 결론과 정책적 제안이 논의되었다.

**| 주제어** 북한 사이버 영향력공작, 사이버심리전, 선거 개입, 허위정보유포, 정보조작

## I. 머리말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사이버전, 사이버심리전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이다. 우선, 북한의 외부 인터넷 연결망과 거의 완벽히 차단된 사이버 공간의 구조적 환경과 달리, 한국은 높은 수준의 IT 인프라와 고도화된 소셜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사회화로 인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환경적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북한은 강력한 사이버 공격능력도 갖추고 있다. 2023년 국가정보장실(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에 의해 출간된 ‘연간위협분석(Annual Threat Assessment)’은 북한 사이버전 능력은 지난 수년간 발전하고 성숙해져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목표를 대상으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ODNI 2023). 이에 더해 이 보고서는 북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사회 공학적(social engineering)’ 발전에도 주목하며 북한 사이버전 능력이 다양한 측면으로 고도화되고 세련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공격능력이 한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어왔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의 금융·정보·기술 탈취를 목적의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수십 차례 발생하였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북한의 금융·정보·기술 탈취 관련 사이버 전력에 대한 대응과 분석연구가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북한 사이버 공격의 직접적 피해의 대상이 되었던 해외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금융·정보·기술 탈취 관련 사이버 공격능력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현재까지 북한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공작(Influence Operation: IO)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외의 북한 심리전, 체제선전·선동활동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의 전통적인 심리전, 심리작전, 전술에 대한 분석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 해외 연구자들의 북한 심리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로서 북한의 세뇌, 프로파간다에 주로 국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권영철 2016; 임영철 1998; 송경호 2008; McFate 2005). 이에 비해, 최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정보유포(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가짜뉴스(fake news) 그리고 정보조작행위들(information manipulation)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경쟁상대에 있는 적들에 비해 더 우위에 있는 내러티브를 전달하여 자국민 외의 특정 국가나 대상의 목표 청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개념의 영향력공작의 맥락과 닿아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NATO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호주, 대만 등 다수의 국가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들 및 특정 이해당사자 국가들의 국민들과 특정 인구집단들을 대상 청중으로 삼아 이들에 대해 펼쳐온 영향력 공작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윤민우·김은영 2023; NATO 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 2022, 2023;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2023). 이러한 해외의 영향력공작 연구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미국, 프랑스, 대만 등에 대한 선거 개입 및 여론조작의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러시아, 중국 등 기존의 권위주의 또는 전체주의 국가들이 미국 또는 서구 유럽의 NATO 회원국가들과 같이 적대적 국가나 경쟁적 국가들의 국내정치와 여론형성에 개입하여 대상 국가에 대해 경쟁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들을 실제로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

나와 러시아 전쟁, 대만의 선거 개입에 적극적인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에서 정보작전들과 영향력공작 사례들은 오늘날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서 실제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평화 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매우 위협적인 전쟁능력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윤민우·김은영 2023).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역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의 강력한 사이버 능력과 한국의 고도화된 사이버 네트워크 사회화는 한국의 헌법으로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 선거제도에 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와 목적을 가진 북한의 영향력공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과거 남한 내 혁명세력 구축에서부터 남한 내 합법적인 정치영역에서의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북한의 한국 선거에 대한 개입이나 여론조성에 대한 영향력공작의 우려는 매우 높은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김윤영 2016; 권영철 2016). 더욱이 실제 북한이 한국의 선거기간에 여러 형태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짜뉴스, 루머 등을 확산하여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북한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여론조성을 위한 허위정보유포와 정보조작활동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연구 및 주장들과 증언들도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김윤영 2016; 권영철 2016; 박수유 2023).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과 북한에 대한 상황들은 현재 북한의 사이버상 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대로 국내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공작, 특히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데 비해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정보유포와 정보조

작을 활용한 한국 선거 개입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이 매우 드물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제 일 순위의 공격 목표인 한국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의 목적, 전략, 전술 그리고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한국 선거 및 여론 개입사례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활동과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선거 등 구체적인 댓글공작이나 개입사례에 대한 정부보고서나 검찰, 경찰 또는 국가정보원 등의 객관적인 수사결과가 없다는 부분은 객관적 연구 수행의 한계점이 된다. 예를 들면, 국내의 상황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이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정보공동체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정보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공식적 정부 보고서와 문건들을 통해 출간하고 보고한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 대만 역시 2018년 대만 지방선거 이후 2020년대만 총통선거를 대비하여 2019년에 대만 검찰에서 중국에 의한 대만 내 사이버상 선거 개입을 수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이들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사례를 아직까지 국가기관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근거가 연구자에 의해 선택되고 분석되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객관적 연구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연구자가 공개 출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한계를 근거로 이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에 대한 현황을 탐색적 분석연구(preemptive explorative study)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이에 더해 글로벌 소셜미디어에서 수집 가능한 북한의 선전·선동 자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질적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수행하

여 현재 연구에 연구분석결과를 일부 포함하였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먼저 북한의 허위정보를 활용한 선거 및 여론개입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는 추진체계와 목적, 전략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분석(content analysis)이 수행되었다. 문헌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국내·외의 다양한 영향력공작과 관련된 정부 공식 보고서, 관련 기관 연구서,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그리고 책 등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허위정보 유포사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 공개 출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헌자료들은 국내·외의 정부보고서, 연구서, 연구논문 등외에도 다양한 신문기사, 뉴스보도, 비정부기구 자료집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평, 평가, 등이 다수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분석대상인 최근 소셜미디어에서의 북한의 선전선동과 관련된 현황과 분석을 위해 YouTube, TikTok, Facebook 등의 글로벌 소셜미디어들에 대한 온라인 포털검색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러티브 질적분석(narrative analysis)도 수행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은 해당 자료들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이 핵심주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간략한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sup>1)</sup> 이러한 다양한 분석

---

1) 글로벌 소셜미디어들에 게시된 동영상이나 쇼츠 등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만을 수행한 연구들(윤민우. 2023. 인지전의 일환으로서 북한 유튜브 프로파간다 활용의 사례분석. 범죄심리연구. 19(3): 83-100.; 김은영 2023.10월11일. 인지전으로서의 북한 유투버 ‘유미’의 사이버 프로파간다 내러티브. 한국사이버안보학회 발표자료)이 출간되어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는 해당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보다 광범위한 북한의 사이버 상 영향력공작에 대한 탐험적 이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 결과는 해당 선행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을 통하여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인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현황과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II. 사이버 영향력공작 관련 개념 정리

연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향력공작(Influence Operation: IO)에 대해 설명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영향력공작(Influence Operation: IO)이라는 용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하나의 공통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영향력공작의 개념은 다양한 행위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정의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허위정보와 정치전쟁(Disinformation and Political Warfare)’라는 주제의 책을 쓴 Rid(2020)는 영향력공작을 공공연한 방식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또는 공작과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방식을 모두 동원하여 대상 국가와 청중들의 정보환경을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단위에서 조작하고 이를 통해 행위자나 행위 국가가 특정 대상 국가나 청중들의 특정 상황에 인식을 방해, 붕괴, 설득 또는 왜곡하여 한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CSIS 2021, 4). Rid의 정의에 의하면 여기서 모든 영향력 공작은 사기와 속임수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와 속임수는 정보의 원천이 가장될 수 있고, 내용이 위조될 수 있으며, 정보 획득의 방법이나 관련 행

위들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윤민우·김은영 2023).

이어서 RAND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영향력공작(IO)’의 개념과 Pamment과 Smith(2022)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Information Influence Operation(IIO)의 개념 역시 중요한 영향력공작의 개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RAND는 영향력공작을 “정보작전과 전쟁, 또는 영향력공작(또는 작전)으로서 적에 대한 전술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적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파간다를 유포하는 것(Information operations and warfare, also known as influence operations, includes the collection of tactical information about an adversary as well as the dissemination of propaganda in pursuit of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an opponent.)”이라고 소개하고 있다(RAND 2023). 이러한 RAND의 영향력공작의 개념은 ‘정보작전’, ‘전쟁’, 그리고 ‘영향력 공작’이라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향력공작과 관련하여 미국과 함께 주요한 연구와 개념의 구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NATO의 영향력공작의 개념의 경우 Pamment과 Smith(2022)의 “Attribution information influence operations”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영향력공작(IIO)’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영향력공작의 양태와 불법성 등에 대해 포함하여 더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설명된 정보영향력공작(IIO)은 “대상청중에게 특정 효과를 성취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도로 주로 불법적 그리고 조작적 행위를 사용한다. 정보영향력공작(IIO)은 ‘합법적 행위를 모방하여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을 악용하여 대중에게 접근하고 대중들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영향력 공작은 소통의 전술들인 조작, 가짜 신원, 악의적 비방, 상징물, 그리고 정보환경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기술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되었다(윤민우·김은영 2023)<sup>2)</sup>

이뿐만 아니라 서구와 반대 연합을 형성하는 러시아, 중국 등의 개념도 중요하다. 이 중 러시아의 영향력공작만을 설명하면 간단히 ‘재귀통제’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영향력 공작을 대상 목표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인식관리의 개념으로서 유사한 개념인 ‘재귀통제(reflexive control)’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재귀통제는 목표 대상자들이 특별히 대상자에 맞추어 사전에 준비해 둔 의사결정에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의견이 기울어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윤민우·김은영 2023). 러시아의 경우 재귀통제 개념 이외에도 다양한 개념과 용어들이 영향력공작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心理战)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분석한 2023년 RAN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해방군(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은 2000년 중반 중국의 핵심적인 삼전(Three Warfares: 三种战法 or 三战) 개념의 하나로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心理战)을 소개하였고 다양한 영향력공작이 이를 근거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후 보다 최근 들어 오늘날의 인지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도메인공작(cognitive do

---

2) NATO에서 출간된 보고서들 중 IO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에서 가져온 정의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Information Influence Operation (IIO). IIO is the organised attempt to achieve a specific effect among a target audience, often using illegitimate and manipulative behaviour. They “exploit open and free opinion-formation by mimicking legitimate behaviour to gain access to and influence the public sphere.”Those carrying out IIO draw on communicative tactics such as fabrication, false identities, malign rhetoric, symbolism, and technological advantages to exploit vulnerabiliti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main operations (認知域作)’이라는 개념이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학계에서 소개되면서 중국 역시 인지 도메인에서의 전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인지전, 영향력공작의 방향으로 심리전이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보고하고 있다(Beauchamp-Mustafaga 2023).

오늘날 이러한 영향력공작은 평화 시와 전쟁 시의 구분이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역시 영향력공작의 개념을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fare)의 일부로서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또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하위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심리전과 인지전의 개념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역시 현재까지 국가나 기관, 학자들에 따른 구분이나 명칭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통일된 개념적 관계성이나 이해가 이론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실제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군대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지전은 심리전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는 이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수행하는 영향력공작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한 반면,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에 관한 전반적 연구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한 다른 주제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매우 크다.

### III. 북한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발달, 목표, 전략, 그리고 기술

#### 1. 북한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발달과 목표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 공작은 기존의 북한 ‘전 조선혁명을 위한 3대 혁명역량(북한, 남한, 해외)’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수유 2023, 91). 1945년 ‘기지론’으로 시작하여, 1950년대 말 등장하고 1960년대 구체화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었고, 2021년 북한의 8차 당 대회를 통해 개정된 「노동당 규약」의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문구에 변화가 나타났다.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과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대치하였다(김일기·채재병 2021; 김윤영 2016; 권영철 2016; 박수유 2023; 통일부 북한정부 포털, 2023/7).<sup>3)</sup> 이 당시의 문구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변화된 문구는 과거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문구를 순화한 것에 불과하여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 있다. 둘째, 사실상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투 코리아(Two-Korea)’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다(김일기·채재병 2021, 1). 그러나 2021년 수정된 노동당 규약 역시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을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 북한의 최종목표가 변화된 것이 아닌 북한의 대남혁명전

3)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2021년 제 8차 당대회 개정): 북한의 대남혁명.

략·전술의 변화와 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방인혁 2012).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 2023년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12월 26일에서 30일간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결과와 함께 김정은이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보도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전하였다(장예지·권혁철 2023).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철저한 국가 간 적대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반대로 단순히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해당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위의 김정은 언급에 관한 분석은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 심도 있게 수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폭넓은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구체적인 변화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적대적 무력사용을 위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 노골적이고 집중적인 대남혁명전략·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높은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변화들은 신냉전 이후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의 연대 강화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의 변화, 그리고 한국 민주화의 진전,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같은 변화된 사회구조, 문화, 정치환경, 북한 내부의 불안정과 주민들이 내포하는 위협요소의 증대, 그리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 중 한국의 사회변화와 민주화와 관련된 요인들만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전략·전술의 변화는 이미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된 1990년 이후부터 드러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기존의 ‘혁명적 전위정당’이라는 ‘지하당’ 이외에 합법적 정치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수행할 합법적 진보정당의 구축에 힘써왔다(박수유 2023, 92). 이는 합법적 정당을 통한 국내정치에 직접 개입으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권영철, 2016; 방인혁, 2012). 또한 북한당국이 한국의 고도화된 민주주의 체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한국 내 반정부활동, 북한의 선전선동 등을 수행하는 대남혁명전략 전개에 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김윤영, 2016).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북한에게 대남혁명전략을 이루는 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서 그리고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전력으로 인식되어온 것으로 보인다(박용환 2021; 방인혁 2012). 실제 2003년 이라크전을 두고 북한은 "미제는 이라크전쟁에서의 승리가 고도기술 무기에 의한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심리전에 의한 악랄한 사상적 와해책동에 이라크가 녹아났다"고 분석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전과 영향력공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드러냈고 이어서 2004년에는 김정일이 “한국의 인터넷은 보안법이 무력화된 공간으로 항일유격전 당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소중한 무기인 총과 같다”고 비유하며, 사이버 공간을 한국 내 친북 의식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박용환 2021). 이처럼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친북의식화 전략수단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은 대남혁명전략을 위한 핵심 역량이자 사이버전의 일환인 사이버심리전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 2.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 추진체계, 전략과 전술

한국에 대한 사이버심리전과 영향력공작을 수행하는 북한의 핵심적 기구와 부서는 정찰총국(산하의 작전국, 204소, 110 연구소 등),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이 대표적이다. 정찰총국(조선인민군 586부대)은 형식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편제되어 있지만, 대남공작의 임무는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는 독립기관이다(한상암 외 2023; 박수유 2023). 정찰총국은 김정은 세습체제를 대비해 2009년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진입’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정보기구들이 개편될 당시 국방위원회 직속 기구로 신설되었다. 정찰총국이 조직되면서 당의 작전국과 35호실, 총참모부(군) 정찰국과 6.15국을 흡수·통합하여 산재해 있던 국내 및 대남·해외 정보기구를 통폐합하였다. 또한 당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이자 영향력공작을 담당하는 북한의 핵심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의 ‘대남전략권’을 북한의 군대인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대외연락부를 225국으로 변경하고 내각소속에 두고 당의 통일전선부는 축소하였다. 이어 2015년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대상 정보활동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였다. 정찰총국은 산하에 7개국을 두고 있으며 이 중 3국인 기술정찰국 산하에 사이버심리전 등을 연구하는 110연구소를 두고 있다(한상암 외 2023). 특히 정찰총국 산하 204소는 ‘사이버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한국의 허위정보유포, 정보조작 등을 통한 선거개입 등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찰총국의 신설 시기, 지시구조, 그리고 역할과 기능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군 주도의 사이버전의 일환인 사이버심리전으로 인식하고 발전시켜왔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주요한 대남공작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는 태생이 1956년 대남선전선동의 업무를 위해 노동당 내 출범시킨 ‘문화부’가 전신이다. 따라서 정찰총국의 신설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대남심리전 사업과 통일전선 공작활동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허위정보유포, 친북 및 진보세력을 지원, 포섭,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제민족민주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의 단체를 두고 한국 내 지하조직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김윤영 2016). 그리고 대남심리전과 대남첩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 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 조평통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강당’, ‘내나라’와 같은 180여 개에 달하는 북한의 웹사이트를 북한과 해외에 개설하여 대남사이버심리전과 영향력공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알려진 바로는 통일전선부 내에도 이른바 댓글팀이 존재하고 대남혁명을 위한 선전선동에 필요한 댓글 전문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방승배, 2013/8/12). 이러한 댓글팀의 존재에 대해서는 Oxford University의 연구보고서에도 설명되고 있는데 댓글팀의 규모는 정찰총국과 합쳐서 약 200~300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Bradshaw & Howard 2019). 정찰총국 산하 댓글팀과 통일전선부의 댓글팀은 한국의 검색엔진의 기사에 댓글달기, 인터넷 커뮤니티(예를 들면,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터넷 카페(진보, 친북 카페, 맘카페 등)등의 토론방, 게시판 등에 정권퇴진을 위한 반정부 여론조장과 악의적 허위정보유포와 가짜뉴스 확산 등의 한국 내 국론분열을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수행한다(김윤영 2016, 256).

문화교류국 역시 핵심적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부서이다. 2009년 개편 당시 225국(구 대외연락부)였던 부서가 2012년 내각에서 통일전선부로 통합된 후 2015년 문화교류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문화교류국은 통일전선부 소속의 정보 활동기구이자 대남공

작기구로서 독자적 활동을 수행한다. 대남공작원 교육, 남파, 한국 내 각계각층 인물포섭을 통한 남한 지하당 구축, 김정은 일가 찬양 및 남한체제 전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이버 전담 기관을 통한 다양한 간첩 및 스파이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의 청주간첩단 사건에서 북한 간첩과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 간첩 교신을 한 사례가 알려졌는데, 이는 문화교류국과 연계되어있다 (한상암 외 2023, 156).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2023년 12월 김정은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이 후 북한이 대남기구 폐지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까지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남선전사업기관들을 정리·재편하더라도 모든 기구들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폐지하는 등의 특정 기구나 현재 김정은의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폐지, 재편, 개편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기존의 대남선전선동 기구들 중 한국이나 해외에 대한 영향력공작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들은 구조적인 기관재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의 주요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기관들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중요하다고 보인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전 또는 영향력 공작의 구체적 활동이 시작된 시점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2003년 이후 미국의 이라크전 사례 이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투능력의 우세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은 사이버 전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후 중국의 군사교리인 ‘사이버 전법’이나 ‘점혈(급소) 전략’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이버 정보전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사이버전 교전규칙을 마련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전, 심리전, 기만전

등의 심리전과 영향력공작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전술개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보다 최근 들어, 2014년 김정은의 ‘인터넷을 우리 사상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선전선동을 위한 기법이 YouTube, TikTok, Bilibili와 같은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예, YouTube의 관광홍보사이트 ‘조선의 오늘’ 채널, 유튜브에 인플루언서(송아, 유미) 등을 활용한 선전·선동)을 이용한 보다 정교해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한우 2018; 윤민우 2023). 특히 이 같은 최근의 변화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영향력공작의 전술을 학습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상 청중 역시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은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백두혈통에 대한 선전선동과 체제선전, 군사적 위협 등의 강경한 발언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조선중앙TV나 우리민족끼리의 선전전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청중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고 개방적인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위장하여 보여주려는 영상을 제작·게재하여 북한의 인권문제와 독재체제를 비난하는 서구언론들과 국가들(특히 미국과 한국 등)의 보도와 주장이 왜곡된 가짜정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북한체제를 보다 글로벌한 청중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기법의 변화를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서구 미디어와 국가들의 신뢰를 추락시키려는 목적의 음모론을 활용하는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영향력공작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해외의 평양여행방문을 촉진시켜 관광산업을 홍보하려는 실제적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청중들에 대한 영향력공작들은 일종의 북한의 이

미지 개선을 위한 소프트파워의 활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경우 중국 내의 북한에 대한 여론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구의 해외 청중들에게도 미국과 서구국가들의 인권탄압, 3대 세  
 습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주고  
 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영상제작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조작·편집하고 자발적인  
 개인에 의한 유튜버 활동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배후  
 의 조직화된 활동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북한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오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려는  
 의도 등은 실제 정보에 근거해 해당 국가의 매력을 어필하려는 소  
 프트파워의 활용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조작을 통한 허위정보유포  
 의 영향력공작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또는 영향력공작의 최종 전  
 략적 목표는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통일전선의 구축이다. 이러한  
 통일전선의 구체적인 전략적 목표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진보, 민주 세력을 포섭하여 친북세력을 확장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을 구축(정치인, 정당, 진보민주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과 노조 등)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둘째,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 혼란을 이끌어내며; 셋째,  
 반정부·반미·반일·반자본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한미동맹 해체  
 여론을 조성하며 허위정보 유포 등을 통해 북한에 적대적 정권을  
 퇴진시켜 반혁명 역량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남조선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북한에 우호적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지난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를 통  
 해 드러난 김정은의 통일정책 유훈에 대한 포기선언과 같은 발언  
 을 근거로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분석과 해석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한국에

대한 통일전선이 최종적인 북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발표가 한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영향력공작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기존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전술적 방법들을 수행해 왔다. 가장 핵심적인 전술은 첫째, 대남심리전 차원으로 허위정보유포, 음모론 확산 등을 통해 국내여론조작과 사회 내 혼란의 초래; 둘째, 북한에 유리한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공작 전개; 그리고 셋째, 친북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을 북한 직영사이트 웹페이지 등에 업로드하고 유포하는 것이다(예를 들면 북한의 주요 사상과 교리, 체제선전물, 책과 동영상 등 자료: 예를 들면 ‘우리민족끼리’에는 1800여 개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다). 또한 넷째, 온라인의 웹페이지나 소셜미디어를 간첩 접선을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전술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직영 또는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최초로 1996년 해외 친북 단체인 ‘북미주 조국통일동포회의’를 통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을 선전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 말 북한이 해외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본격적 사이버 심리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외국가에 약 180개에 달하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론조작, 사회 혼란, 선거 개입 등의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2003년 개설된 ‘우리민족끼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구국전선’, ‘조선신보’, ‘여명’, ‘내나라’ 등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중국(특히 ‘장수’지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해외 무역회사로 위장한 사이버 공작거점(이들 지역들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지역으로 북한의 간첩 활동을 위한 거점들이

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유 2023). 이들 해외과건 요원들은 북한의 정보요원들로 대남선전선동, 사이버전, 해킹, 간첩 지령 및 포섭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은 선거 등의 주요시기에 직접 댓글부대로서도 활동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해 발표된 민주노총 조직원들로 구성된 북한의 지하당의 활동에 대한 수사결과 이들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지령을 하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지령내용은, ‘청와대 마비를 준비하라’ 등이었다(채널A뉴스 2023b). 이 외에도 청주간첩단 사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조직은 ‘북한 바로알기’ 행사조직을 통한 친북한 선전선동활동을 지시받거나 국내 여론분열을 위해 ‘태극기 부대를 사칭하라’,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북한에 적대적인 정당에 대해 여론이나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미·반일·반정부 운동을 지시하는 등의 지령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다(채널A뉴스 2023a).

## IV. 북한 영향력공작의 전개방식과 특징

### 1. 북한 영향력공작 전개과정·방식

북한의 영향력공작의 전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기구들인 통일선전부는 영향력공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북한이 직접·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확산시킨다. 이어 이러한 내용들은 국내 친북(또는 중북)성향의 사이트로 확산, 유포되고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국내 전통적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정보나 음모론의 가짜뉴스 등이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친북성향의 사이트는 앞서 열거된 북한의 선전선동사이트들이 현재 정부의 차단조치로 국내에서 직접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IP를 제 3국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국내 온라인에 북한의 선전선동 자료들의 ‘퍼나르기’식의 확산과 유포를 수행한다(연합뉴스 2013). 그리고 친북성향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주요 웹사이트의 댓글, 소셜미디어의 중요 논쟁이 이어지는 커뮤니티에 침입하여 갈등조장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친북성향의 세력들 외에 북한의 댓글부대들 역시 국내 인터넷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활동한다. 이들은 약 32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은행계좌 등)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활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괴담과 유언비어 등을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더해 국내 사이트에 직접 북한선전선동의 글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활동도 발견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북한의 어뢰로 인한 폭침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무력화하고 미국에 의한 사고 또는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등의 악의적 허위정보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논란을 증폭시켜 심각한 사회 혼란을 가져왔다. 현재는 천안함 폭침 관련 음모론 확산에 있어서 경찰총국 204소의 댓글부대가 직접 참전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해외 주재 공작원들에게 한국의 국정원에 의한 ‘기획 납치극’이라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라는 지령에 따라 공작원들이 이런 취지의 게시물과 글을 국내 사이트에 게재, 유포, 확산시켰다(강윤희 2016).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민노총과 자주통일 민중전위 등에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 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유포해 반일

감정을 고조하라’ 등의 지시를 내려 반혁명세력인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의 분열과 신뢰 하락을 유도하는 전술을 이끌어 가고 있다(박수유 2023, 110; 신동훈 2023). 이러한 북한의 영향력공작의 사이클은 또한 ‘1:9:90’의 법칙 아래 전개된다. 이는 1명의 조직원이 북한 선전물과 허위정보를 사이트에 게재하면 국내외의 연계된 9명이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고 다시 90명에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유포된 허위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확산하고 사회갈등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추적이 어려운 해외 이메일 계정을 통해 대남 선전물을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온라인 빠라’전술도 사용되고 있다(박수유 2023, 110; 유성옥 2020, 37).

지금까지 북한의 선전선동과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영향력공작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들은 기존의 러시아, 중국 등이 활용하는 기법들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기법은 ‘허위정보 유포(disinformation)’와 ‘정보조작(information manipulation)’이다. 이러한 허위정보와 정보조작은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촉진시키기 위해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해 ‘분열(divide)’의 기법과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플레임(Flame)’기법, 그리고 이를 활용한 ‘희화화(mockery)’ 및 ‘비인격화dehumanization)’ 전술 등을 사용해 달성한다. 또한 북한의 오프라인에서의 군사 무력충돌이나 시위 그리고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을 통한 전쟁에 대한 선언적 위협 등과 함께 ‘겁(scare)’을 주어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 가려는 전술적 기법도 사용된다.

<표 1>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

<p>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공작은 기존의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위한 ‘진 조선휘명을 위한 3대 혁명 역량(북한, 남한, 해외)’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li> <li>북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전·선동 및 허위정보 유포와 정보조작 등을 통한 사이버상 영향력공작</li> </ul>
<p>한국 사이버 영향력공작에 관여하는 북한 핵심 기관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총국(산하의 작전국, 204소, 110 연구소 등)</li> <li>통일전선부 및 산하 문화교류국</li> </ul>
<p>전술적 방법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남심리전 차원으로 허위정보유포, 음모론 확산 등을 통해 국내여론조작과 사회 내 혼란의 초래</li> <li>북한에 유리한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공작 전개</li> <li>친북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을 북한 직영사이트 웹 페이지 등에 업로드하고 유포</li> <li>온라인의 웹페이지나 소셜미디어를 간접 접선을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li> </ul>
<p>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전개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의 대남선전선동기구들인 통일전선부에서 영향력공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li> <li>수립된 계획을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확산</li> <li>국내 친북(또는 중북)성향의 사이트로 북한 선전·선동물 등의 확산, 유포 (이때 친북성향의 네트워크와 북한의 댓글부대들에 의해 ‘퍼나르기’ 방식의 확산과 유포가 이루어짐)</li> <li>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국내 주요 웹사이트의 댓글, 소셜미디어의 논쟁적 커뮤니티에 침입하여 갈등조장</li> <li>국내 전통적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정보나 음모론의 가짜뉴스 등이 일반대중에게 전달</li> </ul>

<p>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 전술적 기법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정보유포(disinformation)와 정보조작(information manip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레임(frame)</li> <li>- 분열(divide)</li> <li>- 회화화(mockery)</li> <li>- 비인격화(dehumanization)</li> <li>- 겁(scare)주기 전술 등</li> </ul> </li> <li>• 오프라인에서의 시위와 시민운동 연계 등을 조장하고 이끌어내는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전술도 활용</li> </ul>
--------------------------------------	---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이 러시아와 중국과 모두 같지는 않다. 북한의 경우 댓글요원을 통한 허위정보유포와 확산 등은 오로지 인간이 직접 개설하고 관여한 가짜 계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AI 연계된 기계적으로 생성한 가짜 계정이나 ‘봇(bot)’과 같이 로봇을 이용한 댓글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영향력공작은 한국의 선거기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목적은 대남혁명을 위한 허위정보 확산과 이를 통한 북한에 적대적 정당에 불리한 여론형성을 통한 정권 교체나, 북한연계 지하당이나 세력들의 합법적 권력 획득, 그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혼란을 심화하여 집권여당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도덕적 권위를 추락시키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활용하는 온라인상에서 댓글부대들의 트롤링(Trolling) 등을 통한 직접적 논쟁유발에는 북한요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옥스퍼드대학의 2019년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2019년 보고서는 해외 70개국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적으로 수행되는 허위정보조작 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연구보고서로서는 드물게 북한의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조작과 허위정보유포도 분석·보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은 허위정보유포만 집중되어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은 민간의 개입이 아닌 공공기관인 북한군과 정부기관들만이 관여되어있고, 한국의 선거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댓글 등의 조작활동에는 기계화된 봇(bot) 등의 사용이 아닌 북한국가 배후의 인간댓글부대에 의한 활동이라는 점 등을 확인해주고 있다(Bradshaw & Howard 2019).

이처럼 북한은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에서 기계화된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접근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받는 러시아나,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향력공작을 상시적으로 이어가는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규모나 능력, 범위의 측면에서는 아직 정교함이 부족하고 다양한 기술 기반의 영향력공작 전술기법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가진 인적, 경제적 자원이 영향력공작에까지 확대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현재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 완성을 위한 과업달성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의 금융탈취를 위한 사이버 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한국 내에 침투해 있는 다양한 계층별로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 둔 친북단체와 인적네트워크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북한의 중앙매체나 공식 웹페이지 그리고 간첩 통신망 등을 통해 필요한 지령을 하달하고 작전을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영향력공작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영향력은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근거들이 존재한다. 첫째, 북한은 러시아, 중국의 사례에서 발견된

기계화된 가짜 계정을 사용하거나 ‘봇(bot)’과 같은 로봇을 이용한 댓글의 정보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허위정보유포와 확산에 오로지 인간이 직접 개설하고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의 댓글부대들의 규모는 약 200~300명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댓글 총량과 허위정보유포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제한적이어서 일견 북한 영향력공작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허위정보유포가 국내 기반의 친북, 종북 등 추종세력과 지하당과 간첩 등의 구축세력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북한의 댓글부대의 수가 적더라도 허위정보는 얼마든지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이러한 댓글부대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간에 의한 댓글은 기계적으로 만든 가짜 계정의 활동이나 봇(bot)에 의한 댓글들과 달리 언어와 뉘앙스의 오류, 철자와 문법의 오류 그리고 기계화된 댓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쉽게 감지되지 않아 국내 한국인과 북한 요원의 댓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 댓글요원들 역시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하며 통일전선부는 북한의 댓글요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국식으로 바꾸어 주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댓글공작은 중국의 수백,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마우당이나 ‘스패모우플래지 공작(Spamouflage operations 또는 Honey Badger operations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과 같이 기계화된 계정을 이용하여 시도되는 댓글조작보다도 이를 감지하고 파악하여 밝혀내는 것이 더 어렵다. 최근 들어 Meta나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짜 계정이나 정보조작, 허위정보를 검열하는 행위를 통해 소셜미디어 내의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공작의 수행 증거들이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행위자들이 해외의 악의적 영향력 공작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와 사례들로 사용되고 있다(Meta 2022;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2023).

무엇보다 북한의 영향력 공작이 진보되고 있다는 증후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2019년 이후 YouTube를 활용한 ‘New DPRK’의 ‘은아’, ‘유미’와 ‘송아’ 등의 Vlog와 같이 YouTube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자연스러운 동영상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이 활용하는 기법을 학습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YouTube 선전선동에 대한 학술연구인 윤민우(2023)의 연구와 김은영(2023)의 연구에서는 각각 ‘유미’와 ‘송아’의 유튜브 내용에 대해 내러티브 분석을 수행하여 북한의 영향력공작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유튜브들은 북한당국에 의한 영향력공작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서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서구 사회의 언론에서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영상들을 제공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의 서구국가에서 제기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주장에 의문을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유튜브의 내용 역시 20대 여성과 아동을 등장시키면서 일반적으로 홍보의 역할과 동시에 북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러티브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러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야기 구성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당 유튜브들은 시청자들에게 북한당국의 의도된 내러티브들이 전달되는 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윤민우 2023; 김은영 2023). 특히 중국인 인민군이 영향력공작을 위해 계획적으로 양성한다는 것으로도 알려진 중국 인플루언서 ‘황홍’ 등의 전술을 벤치마킹한 것으로도 보여진다(Charon & Jeangene Vilmer 2021). 또한 이러한 시도는 YouTube에 그치지 않고 중국 소셜미디어 Weibo, TikTok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북한의 경

우, 미국과 서구국가가 운영하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회사들인 YouTube나 Facebook 등에서 계정이 삭제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YouTube는 2019년 New DPRK의 ‘은아’ 등의 YouTube 계정을 삭제하였고 이어 등장한 ‘유미’와 ‘송아’의 YouTube도 2023년 6월 이래로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영향력공작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구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보다 글로벌 소셜플랫폼이지만 중국회사인 Weibo, Bilibili, WeChat, TikTok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의 TikTok의 숏폼 활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TikTok의 여러 계정들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이 찍어서 업로드 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북한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담긴 ‘숏폼’ 영상들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해외여행객들의 북한 내 촬영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해외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해 업로드 한 것으로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YouTube의 ‘은아’, ‘송아’, ‘유미’ 등의 계정과 같이 북한당국의 지원과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북한 선전용 TikTok 계정들 중 “Zoe discovers” 계정 운영자인 백인 20대 초반의 매력적인 외모의 여성의 계정을 들 수 있다. 이 여성은 최근 북한여행을 통해 촬영한 동영상이라면 북한 관련 짧은 시간의 동영상을 다수 업로드 하였는데, 이러한 영상들은 미국과 한국 등 서구언론에서 묘사하는 북한과 반대되는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영상에서 북한의 현재 모습을 1960-7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북한은 정상국가이며 매우 안전하고 행복하며 생각보다 발전했으며 신비롭기까지 한 나라라는 내러티브가 표출된다. 이러한 TikTok의 숏폼 활용은 YouTube의 Vlog 영상들의 활용보다 더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상들을 대량 게재하는 “Zoe discovers”계정

은 러시아나 중국 등이 활용하는 객관적인 제3자(middle men)들을 활용한 기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 2. 북한의 사이버 공간의 활용: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사회혼란 유도, 선거 개입 및 간첩교신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가장 핵심적인 활용은 한국에 대한 허위정보유포를 통한 사회 혼란의 유도와 선거 개입에서 드러난다. 북한이 주도한 영향력공작은 실제 한국 사회에 큰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왔다. 이 중 대표적인 대남심리전이자 허위사실유포의 사례는 천안함 폭침사건을 들 수 있다(최용섭 2011; 채규철 2010; 이상훈 2010, 이우영 2010). 이 당시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악의적인 허위정보(malicious disinformation) 또는 전형적 흑색선전(black propaganda)가 사용되었다. 2010년 3월 26일 피격된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건 원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북한에 의한 어뢰포격에 의한 격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의 국영매체들을(예,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사이트 등) 이용해 ‘남한의 선거전 북풍을 조성하기 위한 자작극’, ‘미군 군함에 의한 사고설’ 등을 제기하며 “남한의 천안함 북한 연루설 조작”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한국 내 친북 및 진보성향의 단체들의 웹사이트에 북한의 선전물과 동일한 선전물이 게시되었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천안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 남남갈등을 이끌어 냈다(최용섭 2011; 채규철 2010; 이상훈 2010, 이우영 2010). 더 나아가 천안함 사건 직후 실시된 지자체 선거에서도 북한은 선거구도를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나누는 선동구호를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켰다(박수유 2023, 111). 결과적으로 천안함을 둘러싼 음모론은 한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

을 미친 사례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북한 정찰총국의 204소 사이버 댓글부대가 개입한 것이 의심되고 있다(성기노 2017; 정영 2018).

이 외에도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역시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허위정보에 의한 영향력공작의 하나의 사례이다. 당시 통일전선부는 북한의 해외 주재 공작원들에게 한국의 국정원에 의한 ‘기획 납치극’이라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북한 공작원들이 이런 취지의 게시물과 글을 국내 사이트에 게재, 유포,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강윤혁, 2016).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 친북 및 진보세력들에게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라’, 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고기 출현 등 괴담을 유포해 반일감정을 고조하라’ 등의 지시를 내려 사이버 공간에서 반혁명세력인 보수언론과 보수세력들의 분열과 신뢰하락을 유도하는 영향력공작의 전술을 사용한다는 의혹도 제시되고 있다(박수유 2023, 110; 신동훈 2023).

무엇보다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 공작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한국의 선거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국의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이 1950년대부터 친북단체, 빠라, 군사적 도발(탄도미사일 발사 및 실험, 핵실험 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전술적 방법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정치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윤봉한 2022; 정영 2018; 최용섭 2008). 최용섭(2011)의 연구에서는 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던 시기에 대선을 준비하던 여야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도발 이후 한국 사회에서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특히 한국의 선거기간에 특정하여 일정하게 관찰될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CSIS 201

7).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은밀하게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여러 정황과 주장들과 연구분석이 제기되었다(Bradshaw & Howard 2019).

북한의 사이버 공간 내 선거 개입 역시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선동과 허위정보 유포 사이클과 거의 동일하게 작동된다. 노동당 통전부나 경찰총국 등에서 허위정보유포나 선전선동 및 비방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과 같은 북한 국영매체의 온라인 웹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하고 이를 한국 내 친북성향 단체와 개인들 그리고 조직들에 의해 인터넷에 확산, 유포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산된 내용들이 다시 국내의 주요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다(장용훈 2011).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 전달되고 국내의 친북성향의 웹사이트나 YouTube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확산은 한국 내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은 오프라인에서 북한이 주로 수행하는 군사적 도발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즉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당론으로 펼치는 정치인과 정당들에 대해 우호적인 내러티브와 분위기가 한국 내에서 확산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더욱 촉진할 수도 있다. 이는 북한이 전쟁의 위협과 공포를 조성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여 평화와 민족애를 주장하는 한국 내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려는 전술이다. 또한 영향력공작에서 다양한 주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마화 전술과 같은 내러티브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정권에 불리한 보수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악마화, 희화화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전달하고 이러한 내러티브가 한국 내 친북세력에 의해 확대되도록 한다. 이러한 선거나 특정 지역의 정치적 지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정, 그리고 중국의 2018년 2020년 대만에 대한 선거 개입에서 민족과 역사적 사실, 적대적 정치세력에 대한 악마화 및 허위정보유포, 그리고 실제적

인 군사적인 위협의 활용을 통한 사이버심리전, 정보조작 그리고 영향력공작의 내러티브 역시 이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격 대상이 되었던 지역에 거주하는 친러시아 세력과 러시아 디아스포라, 친중국 세력들이 이러한 내러티브와 허위정보의 유포와 확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한국 내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과거 수년간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등을 통한 선거 개입의 여지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4)</sup> 일부 주장에 따르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댓글 비방에 북한의 사이버 전력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유망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후보 사퇴 역시 북한이 배후가 된 선거 개입 사례로 보고 있다. 반 전 총장이 무소속으로 대권 출마의 의사를 밝힌 이후, 북한의 노동신문 등의 비방이 전파되었고, 이어 친북 웹사이트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당시 일본 왕세자 나루히토에게 절을 하는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 확산시켜 반 전 총장에게 친일파의 프레임 씌우는 시도가 있었다. 곧이어 반 전 총장은 출마를 철회하였고 당시의 친일파 프레임이 그의 출마철회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알려졌다(Seong Hyeon Choi 2022). 영향력공작에서의 전술적으로 네거티브 공격기법인 회화화는 비인격화의 전술을 활용해 상대 후보의 도덕적 가치를 저하시켜 후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중들의 인식에 개입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적 기법은 2022년 보수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도 시도되었다. 역시 노동

4) 다만, 관례해서 국가정보원의 공식적 발표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신문 웹사이트 등에서 윤석열 후보를 한반도 평화를 탈선시키려는 ‘전쟁광’으로 묘사하면서 비방과 회화화하는 밈(meme)을 게시하였다. 국내의 친북성향 단체들의 웹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들 등에서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에 대한 허위정보유포와 가짜뉴스 그리고 회화화 및 악마화하는 시도들이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언론매체에 보도되기까지 하면서 상당한 과장을 일으켰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허위정보유포의 사례들 중 일부는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김현지·조새수 2023).<sup>5)</sup> 이 사례에서 향후 북한과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해당 사건에 개입된 인물 중 한 명이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북세력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 남북한 군사, 정치, 외교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외의 친북 사이트나 국내의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반미, 반일 반정부, 반국정원 등의 자료와 북한의 선전·선동자료들을 게시하고 국내의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하고 편집하여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우 2013).

다만, 이러한 북한의 선거 개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조작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의 공식적 발표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사례를 실제 조사하고 발표한 미국이나 대만의 사례처럼 이 같은 주장들과 사례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

5) 윤석열-이재명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불쏘시개가 됐다. 이 인터뷰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사건: 출처 : 김현지·조새수. 2023. 9/ 15. 가짜뉴스에 칼빠든 윤석열정부. ‘디지털 언론중재위’만든다.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com>.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북한이 국내의 커뮤니티에 활용하는 선전선동내용들이나 이들이 짜깁기하는 기사들의 내용들은 북한식 표현이 발견되는 등 북한에 의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들을 발견하는 것이나 세계 각국의 IP 주소로 우회해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댓글을 달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의 특징들을 통해서 북한의 활동을 추정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을 직접 증언하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인용한 언론보도들 역시 북한의 선거 개입에 대한 중요 근거로 인용되어왔다. 예를 들면 정찰총국 고위 간부인 대좌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이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 침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 캠페인을 통해 은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CSIS 2017). 그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진보적 시민단체, 친북성향의 단체, 반정부적 정서를 가진 개인과 단체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요원들을 통해 한국의 여론을 조작한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평화의 추구’를 내세우며 북한을 위협하는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활동들을 수행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정당에 대해 비난과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선거 개입에 이르기까지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추가적으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보안법을 피해 간첩 활동을 지원하고 지령을 내리는 등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남파간첩들이나 한국 내 북한 지하당들에게 북한은 주로 무전기를 사용한 A-1 간첩통신이나 난수방송, 은서(隱書)를 통해 지령을 전달하였지만, 오늘날은 과거의 기법을 모두 전폐하고 이메일이나 북한 미디어 웹페이지, 그리고 글로벌 소셜 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2021년 8월 국가정보원(NIS)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된 간첩단들(청주간첩단 외)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북한이 YouTube의 댓글을 통해 사전에 약속된 메시지를 이용해 간첩 지령을 교환하는 창구로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졌다(이창훈 2023). 이 외에도 2020년 8월 29일 북한 대외선전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의 유튜브 계정에 29일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만 들리는 영상이 게재되었다가 곧이어 삭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 평양방송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영상과 1년여 전 우리나라 한 청년우익 단체가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린 난수방송 내용이 똑같았던 것이 한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 내의 친북세력들과 북한의 유튜브 방송채널 간의 모종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채널A뉴스 2020).

## V. 결론과 논의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에 혼란을 조성하여 북한에 유리한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남 선전선동 공작을 벌여왔다. 그리고 오늘날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은 보다 세련된 방식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며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공작은 대남선전선동, 허위정보유포, 정보조작, 그리고 정보수집과 탈취도 포함된다(Pamment & Smith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2023년 12월 김정은의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지속적이며 실존적인 심각한 위협으로서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대상은 주로 한국이고 한국의 선거

기간에 집중된다. 한국이나 북한에 특정 사건과 이슈가 있을 때도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이 대남혁명전략을 합법적인 정치 권력의 획득을 통한 통일전선의 구축의 측면으로 바꾼 이후 한국의 선거 시기는 북한의 가장 중점적인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북한의 공작은 러시아와 중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모, 능력, 대상, 범위 등에 있어서 다소 적은 규모로 수행된다고 분석되지만, 한국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파괴력과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한국 내 상존하는 친북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세력, 그리고 동조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은 북한의 활동을 한국인의 정치활동,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공작의 회색지대 특징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사례처럼 단순히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활용하여 영향력공작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념적으로 동기화된 친북한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더욱 강력한 정보공유, 증폭, 확장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북한의 영향력공작은 기계화된 계정(inauthentic accounts)이나 봇(bot)을 사용하기보다 사람에게 의한 정보조작, 허위정보유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행위자들이나 가짜 계정을 활용한 정보조작기법들과 같은 기계적 계정들의 특징이나 조작정보의 특징들을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민족적 동일성으로 인해 동일한 한글을 사용하고, 역사적 서사와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북한의 내러티브가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다.

이러한 북한의 한국 선거 개입을 위한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은 한국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우선, 선거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과 관련 기관들이 북한의 한국 선거의 개입과 관련된 사례와 허위정보유포 등의 유형에 관해 연구와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언급된 북한개입 허위정보유포 사례들이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심사례들은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드물게 북한의 사이버상 허위정보조작에 대해 분석한 해외의 보고서나 관련된 주장들을 보도한 언론기사들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졌던 천안함 사건 이외에는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대다수의 허위정보, 음모론 등에 대해서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를 제시하는 전문적인 보고서나 분석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천안함 관련 음모론의 유포 역시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로 다수에 의해 추정된 사실들이지만, 이러한 허위정보의 배후에 북한과의 연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나 정부의 발표를 통해 공식화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자들과 관련된 허위정보, 비방, 가짜뉴스 유포 등의 현상들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위험으로 인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없다. 그러나 한국의 대응과 달리 해외의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해당 국가에서 선거에 대한 개입이나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때, 이와 관련된 가짜 계정활동이나 허위정보를 파악하여 해외의 국가나 대리인(proxy)을 활용한 선거 개입과 여론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016년 대선 시 힐러리 클린턴의 민주당의 주변 인물들의 이메일 등을 해킹하고 주요 자료들을 무차별 수집하여 Guccifer 2.0이라는 해커를 가장하여 수집된 자료를 유포한 ‘해킹 앤 리킹(hacking and leaking)’을 이용하여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당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사례에 대해 FBI가 수사를 착수하였고 미국의 정보공동체에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국가정보장사무실(OD

NI)은 2017년 1월 안보위협분석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군 정보 기관인 GRU, 국내정보기관인 FSB, 그리고 해외정보국인 SVR 모두 가담하여 작전을 벌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 선거 개입사건을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영향력공작”으로 평가하면서 “모스크바의 장기적인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려는 열망이 가장 최근에 표출된 사례이다.”라고 평가하였다(ODNI 2017). 이러한 내용은 ODNI 보고서 외에도 미국 국무부의 웹사이트의 자료들이나 FBI 국장의 수사 관련 미국의회청문회 보고 등의 다양한 공식적인 정부기록물로 해외국가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영향력공작의 사례, 활동, 범위, 수법 등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경우 역시 2018년 중국에 의한 대만의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2020년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2019년대만의 법무부는 2018년 선거기간 동안 의심스러운 대만 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내에서의 허위정보유포와 가짜 계정활동, 그리고 중국 정부와 연계가 의심스러운 콘텐츠 팸들에 대한 사실들을 수사하고 중국의 재정지원을 받은 후보들을 수사하기도 하였다(Charon & Jeangene Vilmer 2021). 그리고 대만 법무부는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을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 비유하며 “미디어와 심리전”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만 법무부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만선거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사이버상 허위정보와 정보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의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를 대만국민들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sup>6)</sup>

6) 대만 법무부는 “민간회사들을 통해 많은 수의 콘텐츠 팸, 봇(bot), 그리고 ‘좋아요(likes)’를 구매하여 친중국 후보들만을 지원하는 행위들이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1,000개의 로그인을 구매하는데 5,000대만달러의 돈이 드는 데 이 구매 가격이 선거캠페인 중에 상승한 것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북한 그리고/또는 중국에 의한 허위 정보유포와 정보조작의 의심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실제 2012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북심리전 담당관이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댓글을 달았던 사건에 대해 북한의 국내 댓글공작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였던 사례를 돌아보면 국가정보원은 당시의 북한의 국내 온라인에서의 댓글공작, 여론조작, 허위정보유포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 국가정보원이나 정부의 대응은 사실 전문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실패로 볼 수 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 측에서 북한에 대한 댓글심리전 대응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여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나 이해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당시의 활동이 국내 여론조작을 위한 정보요원의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애초에 북한의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영향력공작이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수많은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이 추정 가능하지만, 어느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대만과 같이 영향력공작에 노출된 국가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사이버 영향력공작이 펼쳐지는 전투현장이 인간의 마음이자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으로 지키는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

과, 일부 계정들은 자신들의 IP 주소를 매일 변경 한 것, 그리고 허가 없이 사용되는 찬탈된 IP 주소들(usurpated IP addresses)과 가짜 계정들 그리고 친중국 지지자들과 반중국지지들 간의 분란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촉진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Facebook과 Line 등에서의 허위정보 유포를 하고 전통적인 일반 미디어에서 이러한 허위정보를 선택하여 보도(pick-up)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흔히 발견되는 범죄수법(modus operandi)이라고 설명하였다.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잘못된 대응으로 실제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한국의 선거제도와 대중여론의 표현의 자유가 조작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례를 전달해야 한다.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에서 적들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의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공작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현장에서 앞선 국가들은 상대방들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침해사례, 피해 정도, 영향력 정도, 그리고 수단과 방법 등을 국민과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이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해치거나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자체의 공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정책적·제도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필수이다. 극단적인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피해대상물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피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서사가 만들어지고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내가 다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조화를 이루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며 결국 해당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하게 되는 소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사례가 있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남고, 금융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통장이 비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은 무엇이 남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사회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북한에 의한 한국의 피해사례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사이버 영향력공작이 선거기간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제안을 내포한다. 한국은 미국이나 나토 그리고 호주, 독일 등에 비해 영향력공작에 대한 대응이 뒤쳐져 있다. 독일은 허위정보유포나 해외의 선거 개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보부 등 각 주요 국토안보기관들과 산하 정보기관들이 팩트체크 관련 업무부터 다양한 허위정보유포와 정보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외국의 영향력공작 및 허위정보를 통한 미국의 선거 개입을 국가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개입과 공격으로 규정하고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사이버 안보와 인프라스트럭처 보안기관(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이하 CISA)에서 이에 대한 사전 차단 정책과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대응 등을 마련하고 있다. CISA의 역할은 한국에 특히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과 함의를 제시한다고 보인다. CISA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을 일반인들이 구체화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 개념화한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의 인식 내에서 가시적이고 형상화한 도로나 시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기, 가스, 물 등의 내용물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인들에게 북한에게 공격받은 선거제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abstract concept)’을 구체적인 ‘구성개념(constructive concept)’으로 만들어 낸다. 이러한 구체적인 구성개념 아래서, 법적, 정책적 대응을 빨리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은 북한의 재정, 능력, 인력 등의 다양한 제한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선거기간에 특히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선거제도를 보호하는 데 먼저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거제도를

미국과 같이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담당 대응기관설립, 그리고 입법까지 마련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의 위험성에 대해 바로 알리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반 국민이 국내에서 북한발 한국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실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남고, 사이버 은행 공격이 발생하면 통장이 빈다. 그러나 영향력공작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보안기술에 근거한 학문적 차원에서 해당 사례들이 국내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 의심사례부터 과거 연관사례들까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연구자들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서 다양한 대남 혁명전술이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들의 개연성은 사실 실현가능성이 매우 큰 주장들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해외의 Meta나 Microsoft사의 자체 감시기관과 같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에 대한 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일반 학자들이 진행하는 데는 매우 큰 한계가 있다. 당장 현재의 연구에서도 북한의 선거 관련 개입의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면서도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사례나 2018년, 2020년 대만 선거사례와 같은 객관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내 북한에 의한 객관적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를 국민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정부에서 준비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과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통일부 2023). 즉, 북한의 다양한 허위정보유포나 댓

글부대 등을 활용한 정보조작 등에 대한 개연성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 역시 아직도 논의와 아이디어 정도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수준에 불과하다. 회색지대에서 작전을 펼치는 사이버 영향력공작을 과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또는 여론개입 또는 여론장악·검열 등이라는 오명이나 프레임에 갇히지 않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권리를 모두 지키기 위해 비상한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지금부터 선거기간이 불과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상 영향력공작은 한국에게는 매우 파괴력이 있다. 국가정보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정부 당국의 집중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영향력공작의 개입과 이에 대한 대응연구들이 신속하게 후속연구로 수행될 필요를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해서 알려진 김정은의 김일성과金正은의 유훈에 해당하는 통일정책의 폐기 발언에 따른 앞으로의 북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공작의 방향이나 변화가능성에 대해 간략한 예측을 논의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은 북한에 의한 대남선전선동의 종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노골적인 영향력공작이 한국에 대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분석된다.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학자들 간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고 있고, 북한의 통일선전부 등 일부 대남선전기구들에 대한 개편, 정리, 폐지 등의 수습을 밟고 있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기구의 개편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해당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결론을 지금 내리거나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의 앞선 발언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과거 대남혁명전략의 최종적인 목적인 한

국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이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북한 내 주민들의 한국문화와 사상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 인식이 극대화되어 남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적으로서 인식하여 북한 내부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추측들이 명확한 근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금까지의 분석자료들을 근거로 판단하면 북한 김정은의 최근 한국과의 통일포기 발언은 한국에 대한 선전선동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포기나 배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의 해당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 등 신냉전의 반미전선의 국제적 연대의 강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서구국가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영향력공작을 감행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공작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욱 강화될 우려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공작이 더 노골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영철. 2016. “김정은 정권의 대남혁명전략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서강대학교.
- 김민주. 2019. “한국 사이버 보안 정책과 민간의 역할.” 『한국 사이버안보학회 춘계 학술 대회』. 서울. 5월.
- 김윤영. 2016. “위장탈북자 간첩실태와 대책.” 『북한학보』 39 (2). 북한연구소.
- 김은영. 2023. “인지전으로서의 북한 유튜브 ‘유미’의 사이버 프로파간다 내러티브”.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의 새로운 지평. 『한국사이버 안보학회 2023 추계학술회의』. 서울.
- 김일기·채재병. 2021. “북한의 개정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변화 전망.” 『INSS 전략보고』 No. 154.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정우. 2013. “최근기승부리는 북한의 인터넷 남침. 북 찬양문건 하루 100건 올리며 용단폭격”. 『월간조선』 8월.
- 김현지·조새수. 2023. “가짜뉴스에 칼빠든 윤석열정부. ‘디지털 언론중재위’ 만든다.” 『시사저널』 (9월 15일). <http://www.sisajournal.com>.
- 박수유. 2023. “남한의 민주화와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변화.” 『신아세아』 30(3): 90-119.
- 박용환. 2021.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
- 박한우. 2018. “북한 유튜브 채널분석: '조선의 오늘'에 대한

- 이용자 반응과 텍스트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권 5호.
- 방인혁. 2012. “김일성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 변화 연구.” 『현대정치연구』 5권:165-193.
- 송경호. 2008. 『한의 대남심리전 양상과 대응방안연구』.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이상현, 2010. “안보위기와 사회갈등 극복.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토론문).” 한반도 위기와 사회갈등. 『제 4차 화해공영포럼자료집』, 63-64.
- 이우영, 2010. “안보위기와 사회갈등: 천안함과 안보 그리고 남남갈등.” 한반도위기와 사회갈등. 『제 4차 화해공영포럼자료집』, 35-61.
- 유성옥. 2020. 북한 대남통일전략의 추진구도와 전개양상. 『전략연구』 27(3):7-50.
- 윤민우. 2023. “인지전의 일환으로서 북한 유튜브 프로파간다 활용의 사례분석.” 『범죄심리연구』 19(3): 83-100.
- 윤민우·김은영, 2023. 『모든전쟁: 인지전, 정보전, 사이버전, 그리고 미래전쟁에 대한 전략이야기』. 서울: 박영사.
- 임영철. 1998.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정형: 주제별, 대상별 전개양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 채규철. 2010.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건 이후의 남북관계. 『글로벌 정치연구』 3월 1호: 67-92.
- 최용섭. 2011. “천안함 사건 이후 나타난 남남갈등에 대한 연구.”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113-138.
- 통일부. 2023. 북한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전문가 라운

- 드 테이블. 통일부 라운드 테이블 토론. 12월 21일.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2023년 7월. 대남전략. 통일방안의 변천. 통일부.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jsessionid=\\_cDlOVCPI4ksxsBU13XRG9U2zvEE9VqYXsbt3NLs.ins12?menuId=MENU\\_76](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jsessionid=_cDlOVCPI4ksxsBU13XRG9U2zvEE9VqYXsbt3NLs.ins12?menuId=MENU_76)(접속일, 2023.11.28.).
- 한상암·이명우·김윤영. 2023. “김정은 시대 북한정보기구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20:145-168.
- Bradshaw, S. & Howard, P. N. 2019. *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zed Social Media Manipulation*. Oxford University.
- CSIS. 2021. Influence and Escalation: Implications of Russian and Chinese Influence operation for crisis management. (November 9). <https://www.csis.org/analysis/influence-and-escalation-implications-russian-and-chinese-influence-operations-crisis> (2023/9/5 접속).
- CSIS. 2017. ROK Elections and DPRK Provocations. A Produce of the CSIS Korea Chair: Beyond Parallel: Bringing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 to Korean Unification. (April 10)<https://www.csis.org/blogs/new-perspectives-asia/north-korea-s-provocative-and-secret-interventions-south-korean> (2023/9/5 접속).
- Charon, R. & Jeangene Vilmer, J-B. 2021. Chinese influence operations: A Marchiavellian Movement. IRS

- EM. <https://www.irsem.fr/report.html> (2023/8/5 접속).
- Choi, Seong Hyeon. 2022. North Korea's Provocative and Secret Interventions in South Korean Elections. (March 7). CSIS. <https://www.csis.org/blogs/new-perspectives-asia/north-koreas-provocative-and-secret-interventions-south-korean> (2023/11/6 접속).
- McFate. M. 2005. Manipulating the Architecture of Cultural Control. *Journal of Information Warfare*. Vol. 4, No. 1: 21-40.
- NATO 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 2022. A capability definition and assessment framework for countering disinformation, information influence, and foreign interference. NATO 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 Riga: NATO STRATCOME. November.
- NATO 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 2023. Dragon's roar and bear's howl: convergence in Sino-Russian information operations in NATO countries? NATO 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 Riga: NATO STRATCOM E. January.
-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2023. Digital threats from east Asia increase in breadth and effectiveness. September.
- ODNI. 2023.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

- 
- igence Community. (February 6)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eclassified Report. 2017. “Background to Assessing Russian Activities and Intentions in Recent US Elections: The Analytic Process and Cyber Incident Attribution,” at iii.: 16 Open Hearing on Russian Interference in European Election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115th Cong. (Jun. 28), (statement of Ambassador (ret.) Nicholas Burns), <https://www.intelligence.senate.gov/sites/default/files/documents/sfr-nburns-062817b.pdf> (2023/11/6 접속)
- Pamment, J., & Smith, V. 2022. Attributing information influence operations: Identifying responsible for malicious behavior online. NATO 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2023/11/6 접속)
- RAND homepage, [www.rand.org](http://www.rand.org)(2023/12/6 접속).
- Rid, Thams. 2020. *Active Measures: The Secret History of Disinformation and Political Warfare*. New York: Farrar, Starus and Giroux.

#### 신문기사

- 강운혁. 2016. 북한 댓글 부대 국내 포털 활동. 『서울신문』 (10월24일).
- 방승배. 2013. 북.‘중북 앱’유포... 댓글부대 ‘사이버알까기’작전. 『문화일보』 (8월12일).
- 신동훈, 2023. 북한발 가짜뉴스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

- 보』(3월20일)
- 성기노. 2017.사이버 유언비어 퍼뜨리는 북한 ‘댓글전담팀’의 정체. 『보안뉴스』(2월17일).
- 이창원. 2023. "오르막길 안 나가" 유튜브 댓글, 민노총 간부 '北교신' 신호였다. 『중앙일보』(5월10일).
- 연합뉴스. 2013.북 통전부. 225국,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총력. 『NewDaily』(3월20일).
- 장예지·권혁철. 2023. 김정은“언제가도 통일 안돼”...남북관계 근본 전환 공식화. 『한계례』.(1월1일)
- 정영, 2018. 북 사이버 심리전 댓글부대 ‘204소’. 『VOA』.(6월22일)
- 장용훈 2011. 북매체, SNS 통해 남한 독자에 기사공유제공”. 『연합뉴스』(11월 14일)
- 채널A뉴스. [숫소리:정치] 2020. “北 평양방송 유튜브에 ‘간첩 지령’이 떴다고...?” 『채널A뉴스』(8월 31일) [https://www.youtube.com/watch?v=\\_n1rd6\\_ZYE](https://www.youtube.com/watch?v=_n1rd6_ZYE)
- 채널A뉴스. 2023a. [동맹과 뉴스터디] “보수 집권 막아라” 북한이 내린 특별지령은? 『채널A뉴스』(4월 2일). <https://www.youtube.com/watch?v=ViMqtVA4kGg>
- 채널A뉴스. 2023b. [동맹과 뉴스터디] "청와대 마비 준비하라" 민노총 간첩단과 북한 지령. 『채널A뉴스』(6월 3일). [https://www.youtube.com/watch?v=0fbO5A\\_-N8Y](https://www.youtube.com/watch?v=0fbO5A_-N8Y)

논문접수일 : 2023년 12월 10일

논문심사일 : 2023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4년 1월 18일

---

# An Explorative Study on North Korea's Cyber Influence Operations : Election Interference and Societal Disruption in South Korea

| **Eunyoung Kim**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 | Abstract

Cyber warfare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PsyOps) conducted in cyberspace have emerged as significant asymmetric capabilities wielded by North Korea against South Korea. Research on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is undertaken on various fronts, both domestically and by major foreign nations directly impacted by North Korean cyber attacks. However, in contrast to the extensive research on influence operations by Russia and China in recent years, comprehensive studies on North Korea's cyber influence operations remain relatively limited. Moreover, substantial evidence suggests that North Korea utilizes dis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through social media during South Korean election periods to shape political landscapes in alignment with its objectives. Recognizing these activities as deliberate efforts by North Korea to leverage cyberspace for legitimate actions, mimicking open and free opinion formation to influence and access the public domain, emphasizes the need for active research and attention to North Kore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and influence campaigns.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ims to analyze North Korea's cyber influence operations by examining their purposes, strategies, tactics, and instances of manipulating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nd intervening in elections using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The analysis draws on diverse literature sources through document analysis. The conclusions and discussions section of the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the findings, discus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stemming from this research.

| **Keyword** North Korea, Cyber Influence Operation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Election Interference, Disinformation Dissemination, Information Manipulation.